
정책참고자료

2016-1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폭염대비 예방활동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4
------------------------	---

2 국민권익위원회

역주행 사고 잦은 강릉 성덕철길교차로 연말까지 개선	6
------------------------------	---

3 기획재정부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9
-------------------------------	---

4 교육부

2016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11
------------------------------	----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벤처·창업생태계 조성 위해 ‘스톡옵션,엔젤투자,M&A 시장 활성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키로	19
---	----

6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야영장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확인하세요	24
------------------------	----

중앙·지방 협업으로 대한민국 문화융성 앞당긴다.	26
----------------------------	----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에 드론을 띄우다	31
---------------	----

강원·경북 일부지역 국지적 가뭄 발생	33
----------------------	----

8 환경부

환경부-9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해 손잡았다 ————— 41

9 고용노동부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개최 ————— 48

10 여성가족부

민관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 ————— 59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엔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있다 ————— 61

12 해양수산부

동·서해 폐기물 배출해역 현장조사 한다 ————— 68

폭염대비 예방활동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폭염피해 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보완·개선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4개 부처*와 합동으로 폭염피해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여기관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지난 6. 8~13일까지 9개 시·도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행정준비사항과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취약계층 관리실태, 대국민 폭염대응 홍보 등 지자체의 폭염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한 전파체계, 무더위 쉼터 운영실태, 취약계층 관리실태 등 전반적으로 폭염상황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는 무더위 쉼터내 거동 불편자 이용개선을 위한 승강기와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경남 합천군, 충남 서천군은 축사시설 내·외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가축 폭염피해 예방 조치하는 등 주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전파했다.

- 다만, 충남 청양군, 울산 남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에어컨이 미설치된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거나, 안내표지판 미설치, 재난도우미 교육 미실시 등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해당 시군구에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 경로당 등 타 지역 주민이 이용 불편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은행, 우체국, 마트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온열질환자 지정병원을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모든 대형병원(529→539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폭염대비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을 시·도에 긴급 지원하고,
- 올여름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더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역주행 사고 잦은 강릉 성덕철길교차로 연말까지 개선 권익위, '정부3.0' 기관 간 협업 통해 교통안전 개선책 마련

-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가 연말까지 입체교차로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생지점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교차로의 문제점을 발굴해 도로교통공단,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덕철길 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아 200여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강릉시 입암동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동해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조모씨(71세)와 홍모씨(34세) 등이 일방통행로를 잘못알고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이 교차로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교통사고로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대부분의 사고가 관광을 위해 강릉을 찾은 외지인들이 교차로의 형태를 잘 몰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 권익위는 2일 오후 2시 강릉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주민,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강릉시 성덕동 성덕철길교차로를 입체교차로 2개소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조정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를 오는 11월말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으며, ▲ 강릉시는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회전교차로 공사(유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포함)를 실시하여 올해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 강릉경찰서는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안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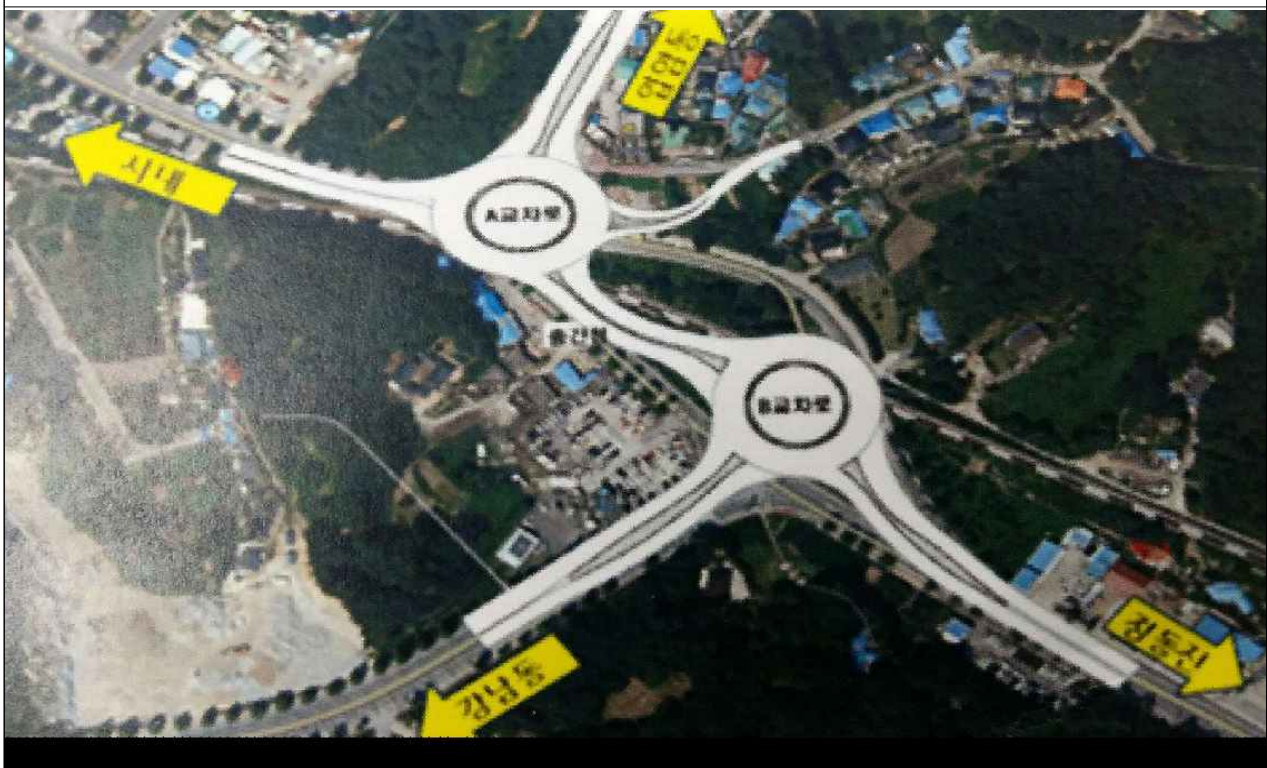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했다.

[붙임] 강릉시 성덕철길 교차로 현황

〈기존〉



〈변경〉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2016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함

- 기획재정부는 '16.5.30(월),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에서,
-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2℃ 이하의 수온유지) 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함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 중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현황>

- ▷(국내) 해양심층수법 제정('07.8) 후 “먹는 해양 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 되었으며,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정체
- 특히, R&D 투자·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으로 규모화 된 산업화에 한계
- ▷(해외) 일본은 2010년에 이미 약 3조원의 시장을 창출(국내시장의 300배 규모)
- ※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한시적 감면(안) 】

- ☐ (부담금 현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부과·징수

-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되어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에 사용

< 부담금 징수 실적 >

[단위 : 백만원]

계	'08	'09	'10	'11	'12	'13	'14	'15
554	67	62	70	101	80	77	97	67

- ☐ (주요내용) 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

구분	현행		변경(안)
부과대상	먹는 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상업용 목적 구입하는자	좌동
부과요율	평균판매가격×판매량×0.5%	평균판매가격×판매량×5.3%	5년 한시적 전액 감면

- ☐ (시행시기) 시행령 공포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부터 적용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16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 7개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은 '16. 6. 13(월),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 국정과제 : 74번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학습도시(시·군·구)-행복학습센터(읍·면·동)'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와 시·도 온라인 평생교육정보망(다모아)을 구축하고,
- 이러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16년 지원대상은 세부 사업별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업 내용	지원 지자체수	비고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7개 시·도	기존 계속 지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35개 시·군·구	신규 7개, 특성화 지원 28개
■ 행복학습센터 운영	92개 시·군·구	기존 계속 지원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15개 시·도	기존 계속 지원

※ 세부사업별 지자체 선정결과 : <붙임 1> 참조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 현장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초 선정된 이후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올해는 기존 선정된 2~3년차 7개 시·도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한다.

※ (3년차 지원) 서울, 대구, 강원, 전남(4개), (2년차 지원) 세종, 전북, 경남(3개)

* '15년 성과평가 결과(40%)와 '16년 계획 평가 결과(60%)를 종합하여 3등급으로 구분

〈 지역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군·구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의지와 여건을 갖춘 시·군·구를 선정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시책과 연계하여 시·군·구 평생학습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올해 7개 시·군·구가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는 136개에서 14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 ◆ (서울 용산구) 문화, 생태환경을 이용한 ‘지붕없는 에코 뮤지엄(eco-museum)’ 조성
 - 관내 박물관, 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형’, ‘역사·문화형’, ‘생태형’, ‘교과연계형’ 등 관광코스 개발 및 그린인테리어, 생태·숲 해설가, 역사문화체험강사 등 강사 양성
- ◆ (울산 동구) 은퇴준비를 위한 5060러닝맨 (Learning Man) 프로젝트
 - 현대중공업의 생애설계지원센터와 공동기획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가정을 대상으로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 실시
- ◆ (전남 고흥군) 우주항공 등 신산업 직업역량 강화교육 운영
 - 우주항공 인프라 등을 활용한 드론지도자 양성스쿨, 천문지도사 양성, 지역환경과 연계한 약용식물 생태해설사 양성, 국립소록도병원과 연계한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 아울러, 평생학습도시로 기 지정된 도시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기존 평생학습도시 22개를 지원하고,
 - 평생학습도시가 아닌 일반 도시들이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6개 시·군·구를 지원한다.

〈 지역 학습공동체의 구심점, 행복학습센터 운영 〉

-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 올해는 기존 선정된 92개 시·군·구에 평균 31.5백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15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한다.

〈 지역의 평생학습정보를 한 곳에 다모아 〉

-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평생교육 체계와 함께, 지역내 평생교육 정보를 검색·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운영도 지원한다.

- 작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정보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 이를 위해 사업에 신청한 시·도당 1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평생교육정보의 현행화, 국가평생학습포털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 박춘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단위 : 시·도, 시·군·구,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자체 수	총 지원 금액	지자체당 지원금액	지자체명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7	395	57	서울, 대구, 세종, 강원, 전남, 전북, 경남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평생학습 도시 지정	7	630	90	서울 용산구, 부산 동구, 울산 동구, 강원 영월군, 충남 공주시,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22	936.3	50	서울 서대문구, 서울 은평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이천시,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전남 담양군, 경북 포항시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6	284.2	52	서울 종로구, 서울 광진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전남 나주시, 경북 의성군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92	2,872.5	31.5	서울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부산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대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대전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울산	중구
				경기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안산시, 양평군
				강원	삼척시, 인제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충북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증평군
				충남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안동시
				경남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15	150	1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49	5,268	-		

※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

□ (서울 용산구) 인적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붕없는 에코 뮤지엄 (eco-museum)’

-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존·활용하면서 구민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용산구민을 위원으로 하는 에코뮤지엄 협의체 구성
- 관내학교, 박물관, 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형’, ‘역사·문화형’, ‘생태형’, ‘교과연계형’ 관광코스 및 에코뮤지엄 브랜드 개발
- 에코뮤지엄 활성화를 위한 용산의 장인, ‘용산장’ 프로그램으로 에코 플래너, 그린인테리어, 생태·숲 해설가, 역사문화 체험강사 양성과정 운영

□ (울산 동구)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학습기적, 5060러닝맨(Learning Man) 프로젝트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기업 밀집지역으로 향후 10년간 연 1,000명의 은퇴자 발생 예상
- 은퇴자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로서 현대중공업의 생애설계 지원센터와 공동기획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가정을 대상으로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 실시
- 취·창업교육은 물론 생활 속 인문학 강좌, 가족소통증진 및 학부모 진로 전문가 양성과정 등 다각적인 세대간 교육 제공

□ (전남 고흥군) 우주항공 인프라 등 新산업 육성, 꿈을 현실로 만드는 휴토피아 고흥

- 규제프리존 드론산업 및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지도사 양성 과정, 천문지도전문가 ‘스페이스 천문지도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취·창업 지원
-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고흥약용식물 생태해설사 과정을 운영하여

웰빙약용식물 민간요법 등 건강지킴이 양성, 건강발효효소식품 개발 및 창업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운영,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소양을 길러주는 전문가 양성

〈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

□ (인천 서구) 꿈(Dream) 잡(Job)는 코디네이터, 진로체험안내전문가 양성

- 청소년 수련관, 연희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한 활동처를 발굴하고 지역 꿈잡 코디네이터 재능기부 활동 지원

□ (강원 철원군) 퇴직예정 군인의 은퇴지원, 철원군민화(郡民化) 프로그램

- 퇴직군인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중장비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하고 은퇴 후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지원

□ (부산 서구) 골목골목 배움터, 마을역사동행길 만들기 프로젝트

- 마을 곳곳에 있는 역사유적을 기반으로 역사교육을 위한 ‘골목길 역사 해설사’를 양성하고 캘리그래피 등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향심 고취

□ **사업 목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
-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내용**

-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역 내 평생교육의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조직, 예산, 인력 등) 및 지역 시책과 연계한 시·군·구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활용 등) 지원

△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연수,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평생학습 축제·홈페이지 및 강사풀 구축 등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사업 등
-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평생교육 추진기반 및 관심이 부족한 시·군·구의 평생교육을 유도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

□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현재까지 136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전체 227개 시·군·구 중 59.9% 지정)하였으며,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따라 '17년 까지 150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정

※ (~'15) 136개 → ('16) 7개 선정, 143개 → ('17) 7개 선정, 150개

※ 연도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01~'15)

연 도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계
도시수	3	3	5	8	14	24	19	6	8	28	11	7	136

미래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위해 ‘스톡옵션, 엔젤 투자, M&A 시장활성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키로

- 홍남기 1차관, 벤처기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제1차관은 6월 14일(화) 10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주요 벤처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업계 참석자(9명) : 정준(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용성(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고영하(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용기(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 김태훈(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엑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대표 등 참석

-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현 정부의 여러차례에 걸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벤처창업 붐 조성, 다양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자생력 있는 민간주도의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시장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참석자들은 첫째, “우수 인재들이 벤처생태계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시점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시점이다”면서, “스톡옵션과 관련한 점진적 제도개선들이 있었으나, 적격 스톡옵션 대상 확대 및 일정금액 이하 규모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등 보다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
- 둘째,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점차로 확대되어 왔으나, 시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해 줄 것”

- 셋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폐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보완필요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이 밖에도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시장거래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방향, 핀테크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 강조와 함께 정부정책 점검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홍남기 차관**은 제2의 벤처·창업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면서,

- “스톡옵션을 활용한 우수인재 유치, 기업인수합병(M&A)·기업상장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벤처·창업의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종합하여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 불임자료 1. : 벤처·창업 생태계 주요 제도 설명자료
- * 불임자료 2. : 간담회 개최 계획안
- * 간담회 사진 추후 송부예정

붙임 자료 1.

벤처·창업 생태계 주요 제도 설명자료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현 행	업계 요청사항
비과세혜택 폐지 ('06) (‘99~’05년 까지 주식매입 가격 혹은 행사이익 기준으로 5,000만원~3,000만 원 비과세)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 만원까지 비과세 (제도 재도입) → 과거(‘99년 도입) 벤처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나, 06년 일몰 이후 폐지

□ 벤처기업 적격 스톡옵션 대상 확대

현 행	업계 요청사항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적격스톡옵션) 연간 행사가 액을 현행 연간 1억원 이하로 한정 (‘15. 1월 시행)	적격옵션 연간 행사가액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이미 우수인력 유입이 활발한 미국(적격 옵션 연간 10만불)의 경우와는 다른 접근 필요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현 행	업계 요청사항
벤처기업 + 창업 3년내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중소기업(‘14. 1) + R&D 투자 액 3천만원 이상인 창업기업(‘15. 7) : 구간별 소득공제	창업 7년 이내 기업(창업지원법 및 中 소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으로 확대 →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부여를 위해, 대상기업 확대 필요

□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폐지

현 행	업계 요청사항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 한도(200만원) 및 연간 총 투자한도(500만원) 규제 ※ (현행 투자자 구분) 일반투자자, 소 득요건구비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폐지 → 일반 엔젤투자 대상기업은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과 같은 공시의무가 없으나 투자한도 없음

☐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16. 6. 14일(화), 10시~11시
- 장소 :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제1세미나실(2층)

☐ **참석자(13명)**

- 미래부(4명) : **홍남기**(제1차관), **조봉환**(추진단 단장), **이정민**(추진단 벤처팀장),
안창용(창조융합기획과)
- 업 계(9명)
 - 협회 : **정준**(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용성**(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용기**(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
김태훈(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 엑셀러레이터 : **황병선**(빅뱅엔젤스 대표)
 - 스타트업 : **양선자**(빅토니 대표이사), **이태희**(벅시 대표이사)

☐ **논의 내용** : 벤처·창업 업계 제도개선 건의사항

참석자 현황

성명	사진	소속	주요이력
정 준 (54세)		벤처기업협회 회장	- (주)솔리트 총괄 대표이사 - 스탠퍼드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이용성 (62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
고영하 (65세)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 (주)SK브로드미디어 회장 - 연세대학교 의대(중퇴)
고용기 (48세)		클라우드펀딩협회 회장	- (주)오픈트레이드 대표이사 -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
김태훈 (32세)		한국핀테크협회 수석부회장	- (주)레이니스트 대표이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황병선 (47세)		빅뱅엔젤스(주) 대표	- KAIST S/W대학원 대우 교수, 아카데미 X 대표 -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기 공학과 석사
양선자 (37세)		(주)빅토니 대표이사	- '13. 3월 창업(벤처기업 인증) -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 학사
이태희 (46세)		(주)백시 대표이사	- 한겨레신문 정치팀장 - 한국외대 무역학 학사

등록야영장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확인하세요

- 야영장 등록 현황 등 캠핑에 유용한 정보 제공 -

본격적인 캠핑철을 맞이해 즐겁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등록된 야영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14. 10. 28.)하고 모든 야영장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영장은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야영객들의 안전한 야영장 선택을 돕기 위해 등록된 야영장을 안내하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등록 야영장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고캠핑에서는, 테마야영장 안내와 캠핑 여행 정보, 캠핑 장비 소개,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하고 편리한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해 시도와 경찰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16. 5. 25.~6. 15.)하고 있다. 특히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해당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가고자 하는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캠핑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불법시설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도 지자체 공무원, 경찰과 협력해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 협업으로 대한민국 문화융성 앞당긴다.

- 행정자치부, '16.6.10. 「제1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0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제1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 홍윤식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과 내실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앙·지방의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고궁 등 무료 관람, 공연 및 영화 할인 등을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4년 시작 되었다.
- '14년 시행 이후,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국민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향상되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함께하는 날로 정착되고 있다.
- * (협력기관) '14.11월 37개 기업 → '16년 5월 90개 기업 및 대학 12개교 등 (참여 프로그램) '14년 1월 883개 → '16년 5월 2,154개 (만족도*) '15년 8월 80.4% → '16년 5월 84.9% * 인지자 중 만족도

- 다만,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 대비 저조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자체 여건과 특색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 졌다.

* (인지도) ‘15. 8월 45.2% → ‘16. 5월 57.6% (↑ 12.4%p)

(참여율) ‘15. 8월 37.2% → ‘16. 5월 38.1% (↑ 0.9%p)

< 주요 논의 내용 >

- 중앙·지방 공동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표적 콘텐츠 적극 개발 및 상품화
-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한 정책 일원화
 - ※ 역할분담(예시): 중앙(관광공사)은 현물지원(지원기준 별도수립), 지자체는 행정지원(관광프로그램 개발, 행사장 및 관광지 개방 등)

- 또한 우리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유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도 논의 되었다.

- 문체부는 ‘16년 방한 중국인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서부 내륙시장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15년 방한 중국인관광객 수) 5,984천명(전체 방한 외래관광객의 45.2% 차지)
(‘15년 방한관광 1인 지출경비) 중국 2,319.0달러(1위 / 쏘 국가 평균 1,712.5달러)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의 공동 홍보·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하였다.

< 주요 논의 내용 >

- 중앙·지방 공동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표적 콘텐츠 적극 개발 및 상품화
-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한 정책 일원화
 - ※ 역할분담(예시): 중앙(관광공사)은 현물지원(지원기준 별도수립), 지자체는 행정지원(관광프로그램 개발, 행사장 및 관광지 개방 등)

- 홍윤식 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가 첫걸음”이라며,
-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 없이 문화를 향유하여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협업하여 문화체험 기반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종덕 장관은 “대내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나아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융성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이, 문화의 꽃과 잎이 피어나는 문화융성의 중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2세션에서는 여름철 녹조방지 대책 등 중앙부처의 협조사항과 태양광 발전시설 활용 촉진 건의(대전) 등 주민의 행복에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참고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협조사항 목록

연번	협조사항	소 관
1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 대비, 추진체계 정비 협조	예술정책관
2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 요청	문화기반정책관
3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역 연계 협조	콘텐츠정책관
4	시도 체육종목단체 통합 및 회장 선거 조기 완료 요청	체육정책관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6	'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불입홍보 협조	체육협력관
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적극 협조	문화정책관
8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동호회 축제 지원 확대 요청	
9	학교 앞 호텔 후속조치 추진 협조	관광정책관
10	관광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협조	
11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협조 요청	
12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제정	문화재청
13	지방문화원 재정 지원 협조 요청	문화정책관
14	국어책임관 활성화 및 국어진흥조례 제정	
15	국제문화교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협조	
16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협조 요청	문화기반 정책관
17	2016 독서의 달 행사계획 수립·실시	
18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9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육정책관

참고2 중앙부처 협조사항 목록

연번	협조사항	소 관
1	대학 구조개혁 추진	교 육 부
2	여름철 녹조 대응을 위한 협조	환 경 부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협조	환 경 부
4	지역의 저출산 대응노력 강화 요청	보 건 복 지 부
5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비규정 준수 협조	여 성 가 족 부
6	모든 제조업체 위해예방관리계획 전면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7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실시	국 가 보 훈 처
8	지역사랑 클라우드펀딩 대회 홍보 협조	행 정 자 치 부
9	지자체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통합·재배치	행 정 자 치 부
10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 총력 경주	행 정 자 치 부
11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추진	행 정 자 치 부
1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추진	행 정 자 치 부
13	2016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 드론을 띄우다

-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항공살포기 검정기준을 제정·시행 -

《 주요내용 》

- ◆ 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분야에 활용되는 무인항공살포기(드론, 헬리콥터 등)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 검정 실시
 -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 제정·공표 : '16. 6. 10.
 - 검정대상 :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용 무인항공기
 - 검정항목 : 구조, 성능, 조작성 난이도, 안전성 등
 - 검정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하였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드론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도 드론의 농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16.6.10.)하고, 검정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은 회전익 비행장치에 살포장치를 부착하여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거나 파종 등의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하여 실시한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드론의 성능,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조사, 성능시험(배출성능, 균일살포성능, 살포작업성능, 이착륙 및 공중 정지성능), 조작의 난이도시험, 안전성시험을 검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검정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드론, 무인 헬리콥터 등에 대한 농업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구입비 부담 경감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경북 일부지역 국지적 가뭄 발생

-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강원·경북 일부지역에 강수량 부족 및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국지적 가뭄 피해 우려가 있다고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보면,

○ 6월 현재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328.7mm)의 127%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원도 평창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50% 이내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 (생활 및 공업용수)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 보다 많고, 하천 유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수준이나, 강원도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아 가뭄상황이 주의단계임
- (농업용수)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6%)은 평년(6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강수량이 적은 강원 영동(속초·삼척·영월·평창·양양) 및 경북 북부(영양·울진·문경) 일부지역은 가뭄상황이 주의단계임

6월 10일 현재 전국 벼 모내기율은 88.6%(경기·강원·충청·경북 등 중부지역은 99% 이상, 전라·경남 등 이모작이 많은 남부지역은 63~85%)로 농업용수 급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1개월 전망

- (기상가뭄) 6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58.6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으로 확대 되지 않으나, 강원도 평창군은 강수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강원도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보다 낮고, 농업용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용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수율이 낮은 강릉·문경·영양지역은 주의단계의 가뭄이 전망됨

○ 3개월 전망

- (기상가뭄)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어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할 수 있으나, 8월부터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가뭄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 전국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농업용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6월 현재 강원 영동 및 경북 북부 일부지역에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 강릉시의 경우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대한 효율적 용수공급 관리를 통해 생활 및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생활용수 부족시 보조취수원인 대형지하수관정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 강원영동, 경북북부 등 일부지역은 평년에 비해 다소 강수량이 적어 밭작물에 시들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농업인께서는 파종

및 정식시기에 밭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용수의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절약 및 필요시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 급수 등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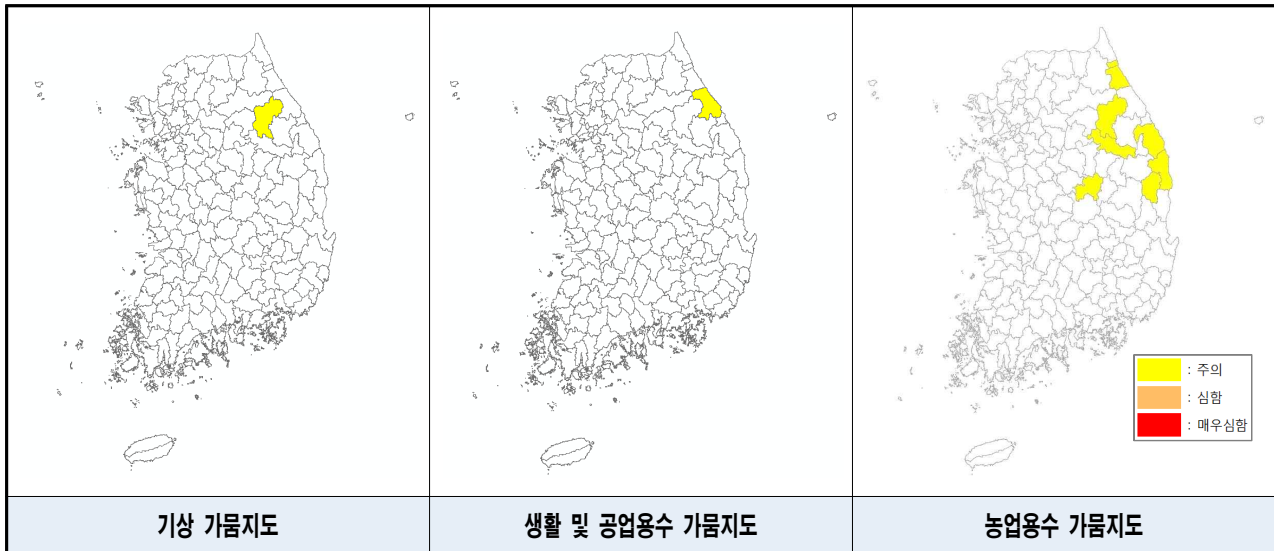
- 또한,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상시 생활 속 물 절약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월 가뭄 예·경보

제 2016-4호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2016년 6월 13일 발표

■ 6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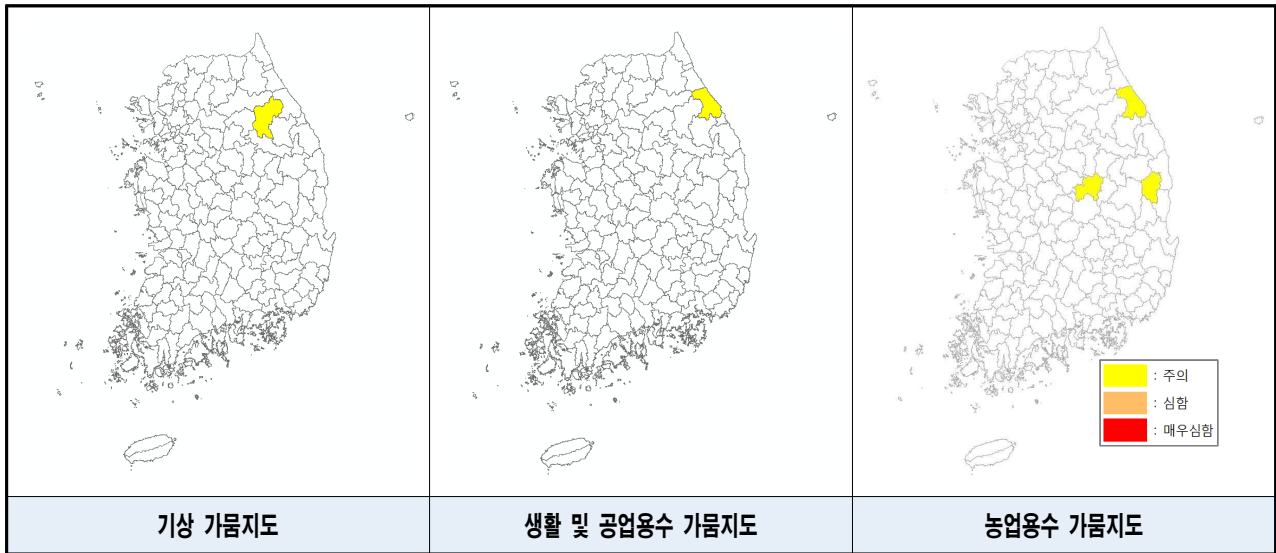


구 분	기상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주 의 (Yellow)	평창군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영양군*, 울진군*, 문경시
심 함 (Orange)	-	-	-
매 우 심 함 (Red)	-	-	-

* 지방·마을상수도 운반·제한급수 현황 : 인천(옹진) 13개 마을 2,08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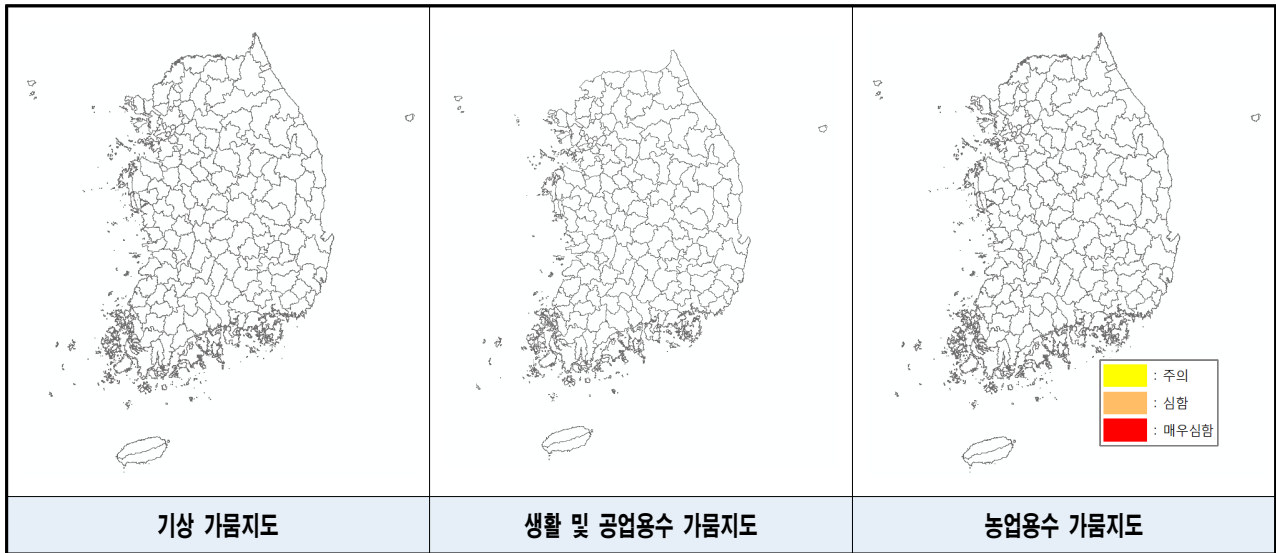
* 농업용수 가뭄 중 * 표시 지역은 발가뭄지역임

■ 1개월 전망



구 분	기상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주 의 (Yellow)	평창군	강릉시	강릉시, 문경시, 영양군
심 함 (Orange)	-	-	-
매 우 심 함 (Red)	-	-	-

■ 3개월 전망



구 분	기상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주 의 (Yellow)	-	-	-
심 함 (Orange)	-	-	-
매 우 심 함 (Red)	-	-	-

참고자료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
농 업 용 수	주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매우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생 활 및 공 업 용 수	주의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상황별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국토부)
	매우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댐·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구 분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
농 업 용 수	주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영농기 전에 논, 수로 등에 물 가두기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 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매우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심함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강구
생 활 및 공 업 용 수	주의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 절수용품 설치하기 ◦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매우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 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환경부-9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해 손잡았다

◇ 환경부, 전력·수자원시설 등을 관리하는 9개 공공기관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자원 등을 담당하는 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참여하는 9개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협약대상 공공기관 대표와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협약식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이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등 공공기반 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 '13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 (1,720억원, '13년) 중 하천·도로·철도·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87%(1,498억원)을 차지('13, 재해연보)
 -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9개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피해 예방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 환경부는 9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와 기술적 방법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9개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평가하여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영국 등 해외에서도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은 전력, 수송, 물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97개 기관에 대해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기후 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다.

□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공공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선도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본보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업무협약 추진계획.
 2.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협약서(안).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6월 16일 13시 이후 환경부 웹하드 게재 예정

□ **목 적**

- 적응대책 수립의 시급을 요하는 주요 사회적 기반시설(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적응대책 모델 마련

□ **협약 개요**

- (일시) 2016년 6월 16(목) 13:50 ~ 14:40
- (장소)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산호실(서울 중구 을지로 16)
- (참석자) 환경부차관, 5개 공공기관 대표, KEI 원장
 - 한국서부발전(주)(발전5사 대표)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안전본부장, KEI 원장

○ **주요내용**

- 협약서(안) (붙임2)

○ **세부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50~14:00(10')	접견 및 행사장 이동	
14:00~14:05(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05~14:10(5')	인사 말씀	환경부 차관(3') KEI 원장(2')
14:10~14:20(10')	업무협약 추진경위 보고 (공공기관 적응대책 추진계획)	기후변화협력과장
14:20~14:30(10')	협약서 서명식	협약당사자
14:30~14:40(10')	기념 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협약서(안)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서부발전(주)(발전5사 대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협약대상 공공기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참여 공공기업의 상호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협약대상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책무) 협약당사자는 협력분야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4조(협약내용)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환경부는 협약대상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 보고서 평가 및 이행결과 모니터링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협약대상 공공기관이 공공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기술적 자문 및 적응보고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고, 보고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한다.

3. 협약대상 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및 자체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울러, 적응보고서에 포함된 적응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자체적으로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6조(협약 기간 및 효력)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제기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하다.

②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이 협약서는 협약서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6월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_____

사장 _____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_____

사장 _____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장 _____

원장 _____

환경부

차관 _____

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이유는?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대부분 사회 기반시설에서 발생하며, 전력,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피해시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큼.

※ '13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 (1,720억원, '13년) 중 하천·도로·철도·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87%(1,498억원)을 차지하고,
· 최근 10년간('04~'13) 극한기상으로 인한 전체 피해복구액(15.1조원) 중 도로·하천·항만 등 공공시설 부문이 59%(8.9조원)를 차지 ('13, 재해연보)

-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공공시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평가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적응계획 보고제를 추진하게 되었음

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관련 해외 사례도 있나요?

- 영국에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제61~69조에 따라 전력, 물, 교통 등을 포함한 공공 성격의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적응을 위한 활동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보고의무기관은 에너지(전력), 수송(철도·항공 등), 물(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 총 97개 공공기관(1차 91개 기관, 2차 6개 기관)임.

- **(기후변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함.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기후변화에 해당함.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하여 피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행위, 혹은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행위
- **(기후변화 위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사건이 미래의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곱으로 표현하며, 기후변화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그로인한 피해가 큼을 의미
- **(기후변화 위험평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 피해 규모 등을 추정하는 것
- **(기후변화 취약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특정 사건의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사건 발생시 인명·재산피해, 사회적 이슈 초래 등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사업장 등

-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개최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8개 자치단체에 대통령상 등 수여 -
- 종합대상: 전라남도 (대통령상)
 -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 부산광역시 (국무총리상)
 -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경기도 부천시 (국무총리상)
 -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5개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장관상)

-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5월 31일(화) 서울 COEX(3층 C홀)에서 개최된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한마당」에서,
- “2015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1)”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58개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그간의 노력을 치하했다.
-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는 17년 만에 제조업 종사자 10만명 회복, 취업자 수 15천명 증가, 특히 부진했던 청년 고용지표 대폭 개선 등을 이루어낸 전라남도가 차지했다.
- ※ 14년 대비 취업자 15천명 증가, 상용 5%P 상승
- 국무총리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은 전국 최초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계 시행, ‘부산일자리 아젠다 10’ 이라는 뚜렷한 정책 방향 제시,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140개소 창업, 322명 고용창출, 창업기업 3년 생존율 85% 유지 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앞장 서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차지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시작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대책을 수립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 공고,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하여 공표하는 제도

* 참여 자치단체: 211개('10년) → 227개('11년) → 244개('12.7월) → 243개('14.7월)
 ↳ 2012년도부터 전 자치단체 참여 ('14.7,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수 감소)

- 국무총리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은 지역특성과 공공영역을 결합한 틈새일자리 발굴로 564명 고용창출, 웹툰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259명, 일하는 어르신 위한 일자리사업을 통한 2,677명 고용창출 등으로 고용률 전년대비 1.3%p 개선, 청년 고용률 3.9%p 개선 등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거둔 부천시가 수상하였다.
-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은 경상남도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11곳이 선정되었다.
- 한편, 특별상은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 구조의 편중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철원군 등 11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비²⁾가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되고, 수상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2)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지원하는 사업

- 특히,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순 시상식에서 벗어나,
 - 수상한 자치단체에 대한 주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정책 등을 홍보하고,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소개 및 채용 절차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된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이 당면한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 라고 하면서,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선도해나갈 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과 노동개혁 현장실천 노력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시상식 개요
- 2. 우수자치단체 선정결과
 - 3.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붙임1】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개요

- ☐ 일시: 5.31(화) 10:00~17:00
- ☐ 장소: 서울 COEX 3층 (C홀)
-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10:00 ~ 17:00	“청년과 함께하는 일자리 한마당” 개최 [정책 부스 및 이벤트 부스 운영, 부대행사 진행]	
13:30~13:50 (20)	참석자 등록	·행사장 내에서는 식전 공연 진행
13:50~14:00	한마당 순회	·고용노동부 장관 및 내빈 행사장 입장
14:00~14:05 (5)	시상식 안내	·(사회) 김민아 SBS 아나운서
14:05~14:15 (10)	· 고용노동부 장관 축사	
14:15~14:20 (5)	홍보영상 상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홍보 동영상
14:20~14:23 (3)	평가소감발표	·평가위원 발표
14:23~15:20 (57)	시 상	☐ 청년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은 특별상 →우수상 → 최우수상 ☐ 수상자치단체 발표 및 시상은 특별상→우수상→최우수상→부문별 대상→종합 대상 광역시→광역시도→기초시→기초군→기초구 (직제순) ① 특별상(11점) → ② 우수상(33점) → ③ 최우수상(11점) → ④ 부문별 대상(2점) →⑤ 종합 대상(1점)
15:20~15:25 (5)	단체촬영 및 폐회	·수상자 전원과 단체촬영
17:00	“청년과 함께하는 일자리 한마당” 폐회	

*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분(총58점)	광역시·도 부문	기초단체 부문
종합대상 (대통령상)	전라남도	
부문별 대상(총리상)	부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최우수상 (장관상) 11점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강원 인제군, 강원 횡성군, 경기 수원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광주 광산구, 부산 영도구, 서울 성동구, 전남 광양시
우수상 (장관상) 33점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 화천군,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여주시, 경기 양평군, 경남 창원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경북 포항시, 경북 상주시, 대구 동구, 부산 사하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인천 서구, 전남 담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특별상 (장관상) 11점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철원군,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경남 양산시, 경북 청도군,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부산 동구, 서울 구로구, 전북 완주군

① 전라남도

□ 17년 만에 제조업 일자리 10만명선 회복

- 제조업이 전남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42%)에 비해 고용비중(9%)이 낮아 기업유지 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육성 등 제조업 일자리 확대 추진
- 지역특성에 맞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입지보조금 지원한도를 분양가 30% 범위 내로 상향지원
 - 100(당초 300명)이상 고용으로 완하여 투자보조금 지급
 - 128개 기업투자실현, 새로운 일자리 3,965개 창출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 광양만·대불산단 플랜트인력 (120명), 뿌리산업 직계(130명), BIO(108명), 에너지·ICT(385명)
- 중소기업 육성지원
 - 유망 중소(344개), 전남형 강소(20개), 지역강소(9개), 월드클래스(2개)지원

담당자: 일자리사업팀 신준수 주무관 ☎ 061-286-2922

② 부산광역시

□ 전국 최초,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 시행

- 지역기업들의 생생한 일자리 정보 수집, 숨은 일자리 발굴 및 고용장애·규제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 시행('15.5.21, 분기 1회 이상 방문·상담)
- '15년 1차로 500개 기업(5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소통관제를 실시하여 구인신청(224명), 건의사항(349건) 등 접수·처리
 - 구인신청 : 224명 중 66명 취업
 - 건의사항 : 349건 중 처리완료 75건, 시정참고 175건, 처리중 99건
- '16년에는 고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1,500개 기업(1,500명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소통관 정례회의, 운영상황 점검 등 추진

□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역발상의 접근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105건 정비·개선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추진단,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규제신고센터 등 적극 활용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우수사례(2건) 공유·제시

✦ 복합 규제지역(GB, 상수도보호구역) 건축허가로 신규 일자리 1,040개 창출

- 10년이 넘도록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S&T모티브(주) 노후건물에 대해 7개 부서가 협의, 증축을 개축하여 해석하는 등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여 건축허가
- 공장 증설을 통해 신규 일자리 300명 고용, 117억 신규 투자
- 대구 S&T전장 본사 및 S&T모티브 양산공장 이전과 자동차튠프라임 구축으로 총 신규 일자리 1,040명 고용 및 575억원의 시설투자 예정

✦ 일반주거지역 내 제과·제빵공장 설립 허용으로 신규 일자리 300개 창출

- 읍스(주)는 제과·제빵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500㎡이상은 공장설립이 불가(국토계획법)하여 공장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
- 국토부 방문건의, 관계자 현장방문 실사를 거쳐 관계법령 개정, 市도시계획조례 공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 '16년 공장 착공으로 신규 일자리 300개 창출, 관련기업 17개 현안 해결

담당자 : 일자리창출과 김효경 주무관 ☎ 051-888-4394

③ 경기도 부천시

□ 부천형 단비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단비일자리는...

➢ 기존 추진사업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샘플링하여
시 산하 공공영역과 결합한 신규 · 재창출 및 틈새 일자리 발굴
단비 일자리 탄생



※ 단비일자리 추진유형 및 사례

① 민간위탁형	② 프리랜서형	③ 재창출형 (업그레이드형)	④ 서비스관리형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분야 대상,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위탁운영을 통해 ①근무시간 단축, ②인력 증원, ③고용승계 및 신규 고용 등 일자리 재창출	예체능(자원봉사, 강사), 경력자 분야와 같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방식의 틈새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현재 진행중인 사업 대상 근무여건 개선, 업무 의욕 고취, 일자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방식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	어린이, 여성, 청년, 노인 등 서비스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로청소관리, 건물청소 관리, 공원청소관리	아트밸리강사, 수영강사, 만화가, 생활체육강사	공공근로사업의 재창출	워킹스쿨지도사,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 노상 주차관리

- 여성, 청년, 시니어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 개선으로 공공영역과 결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재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틈새일자리 발굴 ⇒ 고용 창출 : 4개 분야 564명 고용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엄미현 주무관 ☎ 032-625-2707

4 경상남도

□ 전국 최초, 「경남형 기업트랙」 개설로 청년 일자리 창출

-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기계산업의 침체로 청년 취업 악영향
- 도·우량기업·대학 3자간 협약, 맞춤형 교육 후 졸업과 동시 취업
- ⇒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 취업환경 조성

○ 개요

- 도 : 공무원이 '영업사원', 발로 뛰는 취업 비즈니스(기업발굴, 채용협상)
- 대 학 : 학생 선발, 트랙 전담교수 맞춤형 교육
- 기 업 : 채용인원·조건 확약, 현장실습 및 졸업과 동시 채용
 - ※ 목표 : ('13) 40명 → ('14) 400명 → ('15) 600명 → ('16) 800명 → ('17) 1,000명
- 트랙협약 : ('13) 40명 → ('14) 468명 → ('15) 1,002명(2년 단축 조기달성)
 - 2015년 취업대상 468명 취업대상 중 368명 취업
 - 하이트랙 2016년 취업대상자 중 67명 15년도 조기취업
- 국내 고용환경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해외트랙 개설로 해외 우수 일자리 선점(정규직) : 연 50명('16. 3기준 29명 협약)
 - 트랙기업 인센티브 신설 : 농협·경남은행과 금융우대 협약(최대 27%)

담당자 : 경남도청 고용정책단 진필너 주무관 ☎ 055-211-3313

㉔ 광주광역시 광산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 공공부문이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개선
- 기존 민간위탁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직근로자 141명을 우선 채용
 - 위탁사무관련 기간제근로자 직접 채용 : 51명
- 간접에서 직접방식으로 고용방식을 바꿔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
 - 낡은 관행을 깨고 도시환경 관리에 공공성 확보
 - 저(底)비용 고(高)효율 경영으로 직영 대비 관리 비용 9억원 절감효과로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 일자리사업 경쟁력 강화

담당자 : 광주광산구 사회경제과 김미숙 주무관 ☎ 062-960-8426

㉕ 서울 성동구

□ 수제화· 의류봉제 등 전통 산업 계승 발전

- 서울시 전체 제화업체의 86%가 밀집, 성수동, 의류제조업 지역 특성을 살려 성동구를 토탈패션 특화지역으로 조성 추진
 - 수제화 및 봉제인력 고령화로 인한 신규 기능 인력 양성 교육(15년 수제화 85명, 의류봉제 60명), 집약적인 기술전수 및 장인 양성을 위해 수제화 공방 및 봉제마을공방(2개소) 조성
 - '성수 수제화'라는 지역브랜드화 성공
 - 수제화 판로 개척을 위해 수제화 마을기업 SSST, 수제화공동판매장 From SS (16개소), 수제화 구두판매전시장 운영 등 연10억원의 매출
 - 경력단절여성 대상 봉제기술인력 집중양성을 위해 봉제교육장 설치, 현장기술인력의 기술숙달 훈련으로 봉제협동조합 창업으로 자립 추진
- 담당자 : 서울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이진숙 주무관 ☎ 02-2286-6384

7 전략북도

□ 전국 최초 지역인재채용 공개오디션(잡영챌린지) 개최

- (추진배경)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채용문화 경험 및 도전정신 확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 붐업 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스펙과 비주얼이 아닌 열정과 잠재역량으로 승부하는 스펙초월 오디션
 - * 「슈퍼스타 K」와 같은 공개오디션으로 3차례 예심, 합숙멘토링(2박 3일)을 거쳐 본선에 오른 구직자가 기업 임원, 각급 기관장, 참관단 앞에서 PT 셀프마케팅 경연
- (추진성과) 청년채용 공개오디션 시즌 1(6월, 시상위주), 시즌 2(11월, 채용연계) 개최(시즌별 참가자 300명(본선진출 12명, 심사단 12명, 관람객 280명))
 - ※ 수상자 채용확정(5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이스타 항공

□ 전국 총학생회연합회 지역기업 순례 추진(8박 9일)

- (사업개요) 도내 대학생들이 지역기업 및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 학생 주도의 기업순례 추진
- (주요내용) 도내 9개 대학, 200여명 참여
 - i) 기업탐방 : 전북 소재 우수기업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방문 현장

방문 및 취업정보 공유(기업 9개사, 공공기관 12개소)

ii) 도보순례 : 도보행군을 통한 지역 자연과 지역산업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

iii) 해단식 : 도지사와 함께 하는 청년 일자리 生生 토크 개최

○ (성과)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93% 만족 응답

※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자부심,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의 계기

담당자: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담당자 황준수 주무관 ☎ 063-280-2826

8 광주광역시 북구

□ 청년 일자리창출 중점 추진

○ 추진 배경

- 광주지역 청년실업률 10% 수준 상승, 고용률 1.8% 하락
- 고용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 발표 등 청년일자리 사회적 이슈 확대

○ 주요 내용 및 주요성과

- 북구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24백만원 4명 채용, 2018년까지 1억원 확대
- 청년허브센터 운영 : 청년문제 공유 공간, 일자리창출 기반 제공, 청년아카이브 등 16개 청년단체 189명 참여
-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일자리 박람회, 고용복지+센터 내 취업정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동행 면접 등을 통해 488명 취업 연계
- 청년일자리 아카데미 개최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청년 미생들의 권리찾기(7회),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3회), 청출어람 청어람 직업인터뷰(7개교 1,500명)
- 청년 대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 금형설계 융복합 IT 인력양성사업(33명 취업), 생산자동화설비보전 인력양성사업(13명 취업)
- 북구 청년문화센터 조성 준비 : 청년타운홀 미팅개최(3회), 청년문화+사회적경제 융합시스템, 부서협업 체계 구축

담당자: 광주광역시 북구 기업지원과 담당자 정성오 주무관 ☎ 062-410-6580

민관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여성위생용품 연간 100만 개 지원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민관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 이번 지원은 이마트와 함께하며, 앞으로 3년 간 연간 100만 개(1억 3천만 원 상당)를 전국 202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전달한다.
 - 지원용품은 센터 등에 비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번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됐다.
- 여성가족부와 이마트는 6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위생용품 전달식을 가진다.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2개소
- 지원수량 : 연 1백만 패드, 1억3천만 원 상당(센터 당 월 1박스(420패드))
 - 재고 부족 시 이마트 점포에서 보충(월 1박스씩)
 - 지역 센터별 이용자 수에 따라 수량 조정 예정
- 지원방법 : 지역 이마트 점포에서 각 센터로 직접 전달
- 지원기간 : 3년 단위로 연장
- 후원기업 : 신세계 그룹(이마트)

혁신도시엔 ‘초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이 있다

- 2015년도 연간 25억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감축 -

□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녹색건축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15년도 운영결과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 에 대한『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사업**』이 마무리돼 이들 기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 한국전력공사(전남),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 대한석탄공사(강원),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우정사업조달사무소(경북), 국세청고객만족센터(제주)

** (사업개요) 10개 혁신도시별로 1개 기관 선정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성능 강화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절감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12~'15년 기간중 10개 기관에 총279억 지원)

○ 시범사업 전의 기존 설계공법에 비해 34~63%의 에너지를 절감해 1년에 약 25억 원(연간 16,262 메가와트*)의 전력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6,262MWh는 4,840여 가구(월평균 사용량 280kWh)의 연간 총전기 사용량으로, 잣나무 4만 2천여 그루로 7,631톤 이산화탄소(CO₂)을 감축하는 수치임

** 국가전력 배출계수 ≍ 1kW x 0.4663kgCO₂

○ 아울러, '17년에 나머지 3개 기관*도 준공·운영하면, 추가로 연간 6,804 메가와트(약10억 원)의 전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교육개발원(충북),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4개 공공기관 중 10개 혁신도시별 1개씩을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단열벽체·창호, 태양광·지열 등 최적화된 설계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성능 강화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300kWh/m²·yr) 보다 에너지 소요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에너지절약 기술이 집약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선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 건축기술을 도입하고, 향후 민간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녹색건축 모델을 창출하여 에너지절감·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 시장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빌딩과 같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민간부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 각 시범사업 공공기관에 홍보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 요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녹색건축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홍보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시범사업*을 추진

* 혁신도시 이전청사 1차 에너지소요량을 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 이상 감축($300 \rightarrow 150\text{Kwh/m}^2 \cdot \text{yr}$)하여 에너지 효율 1+ 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강화

○ 혁신도시별 1개씩 10개 기관이 시범사업 추진하여 준공 7, 공사 중 3

□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

이전기관	지역	녹색기술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적용 기술	비고
계		559			
한국전력 공사	전남	28	‘12.9~’14.10	고성능창호, 고단열재, LED, 남측면 차양, 태양광, 지열	준공
LH	경남	160	‘12.7~’15.3	고성능창호, 고단열재, LED, 남측면 차양, 복사 냉난방, 지열	“
대한석탄공사	강원	30	‘12.12~’14.9	고성능창호, 이중외피, 고단열재, 옥상녹화, 자동제어, 공조시스템	”
한국전기 안전공사	전북	71	‘12.9~’14.4	고성능창호, 건물외벽BIPV, 태양광 급탕	“
한국에너지 공단	울산	54	‘15.12~’17.1 2	고성능창호, 이중외피, 단열, 자동제어, 고효율 조명,	공사 중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부산	27	‘12.8~’17.6	고성능창호, 단열, 이중외피, 자동제어, 태양광, 지열, 고효율 환기	“
한국교육 개발원	충북	93	‘14.1~’16.12	고성능창호, 단열, 이중외피, 자동제어, 고효율 조명, 대기전력 차단설비	“
한국사학 진흥재단	대구	25	‘12.9~’14.3	고성능창호, 단열, 이중외피, 전동차양, 자동제어, 고효율 조명, 중온수흡수식 냉동기	준공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경북	47	‘11.3~’13.1	고성능창호, 단열, 전동차양, 자동제어, 고효율조명, 태양광	“
국세청고객 만족센터	제주	24	‘12.8~’15.7	단열, 이중외피, 전동차양, 전열교환기, 태양열, 급탕, 풍력발전	“

구분		연면적 (㎡)	최초 에너지 소요량 (kWh/㎡)	녹색물 에너지 소요량 (kWh/㎡)	에너지 절감효과				CO ₂ 절감효과	
					절감량 (kWh/년)	절감률 (%)	전기단가 (원/kWh)	절감액 (백만원/년)	절감량 (kgCO ₂)	잔여 그루/년
준 공	한국전력 공사	98,629	209	112	6,982,478	46	156	1,088	3,298,436	17,995
	한국사학 진흥재단	4,737	300	149	403,315	52	170	69	107,992	1,015
	대한 석탄공사	6,126	300	110	1,164,879	63	148	172	623,732	3,002
	한국전기 안전공사	17,847	300	143	2,073,079	52	127	263	968,087	5,342
	한국토지 주택공사	97,167	195	131	5,638,444	34	147	828	2,633,040	14,531
	우정사업 조달사업소	8,198	300	145	369,215	53	143	53	82,945	779
	국세청고객 만족센터	5,622	300	140	241,989	52	157	38	59,470	559
소 계		234,326	-	-	16,262,195			2,511	7,631,287	43,223
시 공 중	한국교육 개발원	25,816	300	138						
	한국에너지 공단	24,298	200	147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9,239	244	66						

붙임3

녹색건축 요소기술 현황(내건물 사례)

□ 외부 직사광선 차단(루버 및 외부전동블라인드)



· 직사광선 70% 차단 (남측 전면부 다이아몬드형 루버)



(수직루버)

(전동블라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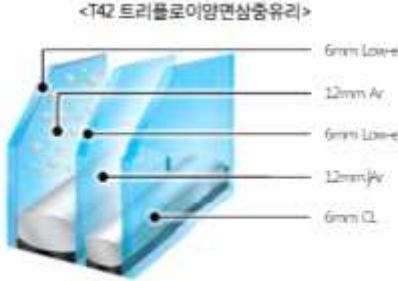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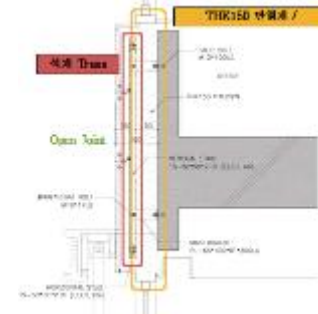
□ 자연환기 및 채광(아트리움)



아트리움

썬큰

□ 고효율 창호 및 단열

	
· 1등급 건물대비 50%이상 성능강화	

□ 고효율 기자재(인버터 공기조화기, 전열교환기 등)

	
고효율 전동기	인버터 판넬

□ 복사냉난방

		
·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건물 냉난방시설		

□ 조명제어 및 인체감지 센서

		
· 조명제어 및 인체감지 센서를 통하여 조도 자동제어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집광판	태양열 진공관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 BEMS를 통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동·서해 폐기물 배출해역 현장조사 한다

- 해양과학조사선을 활용하여 동·서해 배출해역 모니터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동·서해 폐기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배출해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양과학기술원 위탁 수행)한다.

배출해역의 환경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동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전문연구기관이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등은 배출해역환경현황 파악이나 변화 추이 분석, 배출해역 관리정책 마련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2015년 모니터링 결과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급감*하여 배출해역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밝히고, 일부 오염심화 구역에 대한 복원 방안으로 준설토 피복**의 효과를 분석·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는 지난 5월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관리 정책」을 마련하였다.

* 해양배출량: '05년 993만^{m³}→ '10년 448만^{m³}→ '15년 26만^{m³}('05년 대비 97.4%↓)

** 해저에 퇴적된 오염물질 상부에 양질의 준설토 등을 덮어 오염물질을 격리시키고 상부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

이번 배출해역 현장 조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과학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를 활용하여 약 15일간 80~1,500m 이상 깊이의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고 해저 생태계를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오염도가 높은 구역이나 준설토 피복 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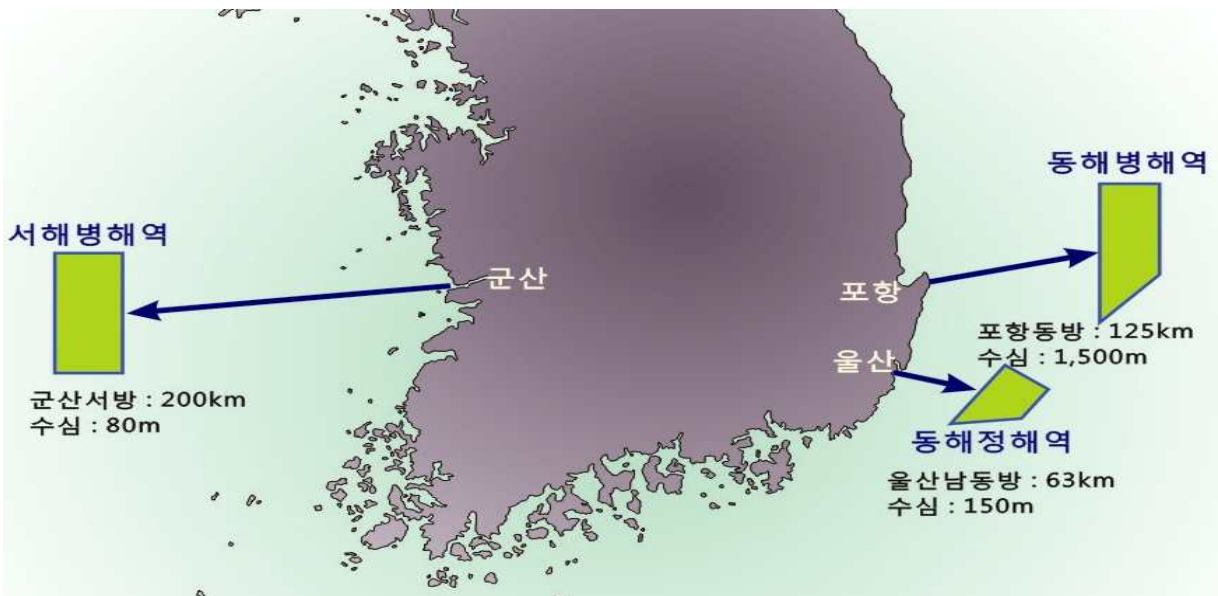
이후 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현장 조사 시 채취한 해저퇴적물 및 저서생명체 샘플을 기반으로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 생태 독성 여부, 저서생태계 건강도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년 말경에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이후 해양환경의 변화 모습을 분석하고 오염심화구역을 정밀 조사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배출해역 중장기 복원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수행기관) 해양과학기술원(주관) 수산과학원·해양생태기술연(협동)
- (모니터링 개요)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3개 배출해역에 대해 퇴적물, 저서생태계, 수산물 안전성 등 모니터링(채취·분석) 등
- (추진목적 및 경위) 배출해역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배출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중('04~)

□ 배출해역 현황



□ 해양배출 금지정책 추진경과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수립('06.3)
 - * 산업폐기물(5종)에 대하여는 즉시 금지하고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12년부터 금지, 연간 배출 허용량 제한 시행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12.7) 수립
 - '13년 분뇨(오니), 음폐수를 '14년 폐수(오니) 금지, '15년 폐수·폐수오니를 마지막으로 '16년부터는 런던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한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참고 2 해양과학조사선 개요 및 현장 분석 사진

□ 해양과학조사선

주요 제원	사진
·(선명) 온누리호 ·(전장/선폭) 63.8m/12.0m ·(국제총톤수) 1,422톤 ·(항해속력) 15knot	

□ 배출해역 현장 조사 사진

